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겨울철 논 활용 조사료 재배 시 직불금 지원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업·농촌에 필요한 규제 개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

겨울철 논 활용 조사료 재배 시 직불금 지원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논 활용 조사료 재배에 적극 참여 하세요 - 직불금 지원, 액비 살포 우선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추진]** 겨울철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에 **경종농가 참여 독려**, 직불금 등 **다양한 지원혜택 제공**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경종농가 재배참여 등 적극 독려
- **[지원]** 겨울철 논 활용 **사료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원**(‘13년도 동계 파종작물부터)
- **[목적]**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을 **축산농가 자가제조물량과 부존자원 활용 물량까지 대폭 확대**하여 생산·이용 활성화 유도, 지역별 목표제 도입을 통한 **조사료 재배확대 책임성 강화**
 - ※ ’11년 식육가공업체 2,329개소에서 724천 톤 생산

□ 주요내용

- **[사료작물 재배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위해 겨울철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에 **경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직불금 등 **다양한 농가지원 혜택** 제공
 -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확대**
 - **농진청·지자체·농협 등과 협조**하여 동계 사료작물 파종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종농가의 재배 참여 적극 독려**
- **[농가소득 증가 및 혜택]** 겨울철 유향 논을 활용해 조사료를 재배하면 **농가소득 증가**는 물론 **직불금, 사일리지 제조비 및 종자 구입비 등 각종 지원 혜택** 제공
 - 겨울철 논에 조사료 재배 시 ha당 예상 조수익은 약 260만 원(ha당 20톤 생산, 사일리지 가격 130원/kg 기준)

- 경영비 등을 제외한 소득은 약 150만 원(사업지원분 포함)으로 겉보리(약 125만 원) 등 식용 맥류의 소득보다 높고, 2014년부터 지원되는 직불금('13년도 동계 파종작물부터) 포함하면 **소득 효과는 더욱 증가** 예상

※ 직불금 지원계획('14년도 정부 예산안): 20만 원/ha

○ **[생산 및 유통 지원체계 강화]** 경종농가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지원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고품질 가축 분뇨 액비 우선 지원**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을 축산농가 자가 제조물량과 부존자원을 이용한 제조 물량까지 확대
- 경종농가가 조사료 경작이 용이하도록 지역 농·축협, 조사료 경영체 및 조사료가공업체(TMR업체)와의 연결체계 구축

○ **[지역별 책임성 강화 유도]**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제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적극 호응 유도

- 지자체별 축산규모와 재배가능 면적을 토대로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 설정, 지역실정에 맞는 확대방안 마련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소비자물가지수]** 107.6(2010년=100), **전월대비 0.3%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7% ↑

〈연도별 10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구 분	연도별 10월 동향					최근 월별 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2013.4	5	6	7	8	9	10
지 수	97.5	101.1	104.7	106.9	107.6	107.3	107.3	107.2	107.4	107.7	107.9	107.6
전 월 비	-0.3	0.0	-0.2	-0.1	-0.3	-0.1	0.0	-0.1	0.2	0.3	0.2	-0.3
전년동월비	2.0	3.7	3.6	2.1	0.7	1.2	1.0	1.0	1.4	1.3	0.8	0.7
전년동기비	2.8	2.9	4.0	2.3	1.2	1.3	1.3	1.3	1.3	1.3	1.3	1.2

○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106.9, 전월대비 동일

※ 전년 동월대비 1.6% ↑

○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105.9, 전월대비 0.1%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4% ↑

○ **[생활물가지수]** 106.4, **전월대비 0.6%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3% ↓

- (식품) 108.8, 전월대비 1.4% 하락(전년 동월대비 1.0% ↓)

- (식품외) 105.4, 전월대비 0.1% 하락(전년 동월대비 동일)

○ **[신선식품지수]** 104.3, **전월대비 6.5%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1.1% ↓

- (신선어개) 107.4, 전월대비 0.6% 하락(전년 동월대비 0.4% ↓)

- (신선채소) 89.8, **전월대비 14.9% 하락**(전년 동월대비 17.8% ↓)

- (신선과실) 117.4, **전월대비 2.7% 하락**(전년 동월대비 10.6% ↓)

- (기타신선식품) 91.3, 전월대비 3.5% 하락(전년 동월대비 16.2%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08.6, 전월대비 4.1% 하락

※ 전년 동월대비 5.4% ↓

- (농산물) 110.2, 전월대비 5.9% 하락(전년 동월대비 10.6% ↓)
- (축산물) 104.4, 전월대비 2.4% 하락(전년 동월대비 3.5% ↑)
- (수산물) 110.8, 전월대비 0.4% 하락(전년 동월대비 1.0% ↑)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구 분	품목수	가중치	2012.10월				2013.10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9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9월)
총 지 수	481	1000.0	106.9	-0.1	2.1	2.3	107.6	-0.3	0.7	1.2
농축수산물	71	77.6	114.8	-2.5	5.9	3.4	108.6	-4.1	-5.4	-0.6
농 산 물	51	43.5	123.2	-2.6	11.4	8.9	110.2	-5.9	-10.6	-0.2
축 산 물	6	22.1	100.9	-3.6	-3.4	-7.1	104.4	-2.4	3.5	-2.6
수 산 물	14	12.0	109.7	-0.7	1.5	2.8	110.8	-0.4	1.0	1.6

〈2013년 10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품목	닭고기(3.8), 당근(12.6), 가지(9.3), 오이(4.3)	쌀(6.3), 돼지고기(4.5), 닭고기(9.0), 달걀(8.3), 혼식곡(23.0), 바나나(16.4), 조개(11.6)
하락 품목	배추(-43.8), 돼지고기(-6.0), 시금치(-52.8), 배(-18.7), 무(-26.1), 사과(-5.3), 양배추(-31.4)	고춧가루(-27.9), 배추(-36.7), 파(-44.9), 사과(-11.2), 포도(-18.9), 무(-33.2)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업·농촌에 필요한 규제 개선

※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http://reporter.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10. 10 ~ 11. 6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20건
- 주요내용

〈농업·농촌에 필요한 규제 개선〉

- 까다로운 농산물가공 규제로 가공산업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 6차 산업 활성화 위해 농지전용, 농산물 가공 등 규제완화부터 해결되어야
- 농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공시지가 기준 재설정 요구
- 친환경농산물인증 부실 우려, 인증심사기준 강화해야
- 농약잔류검사 확대 실시해 무농약농산물 출하 장려금 올바르게 지원해야
- 발직불금제도 재배품목 규정안 수정 요구
- 축사건축 허가 남발로 환경오염 우려, 일정거리 규제 필요

〈기존 규제개선 제안내용〉

- 소규모 농산물가공업 폐수 배출 시설기준 완화 요망
- 농가보조금 지원사업 부가세 면제 또는 환급 가능하게 해야
- 외국인근로자 패널티 제도로 고용주 피해 최소화해야
- 외국인근로자고용 관련 산재보험 개선 절실
-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면적 확대 요구
- 농지에 시설물 설치 및 건축에 규제 필요
- 산림개발허가 엄격화해 산의 공익적 가치 보존해야

〈기타 농촌현장 여론〉

- 지역축제 과열 심각, 특색 있는 축제로 통합 운영해야
- 농협 농자재 구입 시 조합원 상환 혜택 늘려줘야
- 농촌 고령화 가속, 노후복지제도 개선 시급
- 동결된 쌀값, 현실화 촉구
- 농업·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시급

□ 농업농촌에 필요한 규제 개선

○ 까다로운 농산물가공 규제로 가공산업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 쿵을 수확해 메주를 만들어 된장, 간장으로 2차 가공해 팔면 쿵만 생산하는 것보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농업인 모두가 잘 알고 있음. 그런데 까다로운 시설이 갖춰있지 않으면, 쉽사리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받기 마련이라 농업인이 선뜻 가공산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임.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함.<강원 강릉, 송인숙>

○ 농지전용, 농산물 가공 등 농업규제 완화부처부터 일원화해야

- 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은 대개 그린벨트나 절대농지가 많아 건축물 규제는 물론, 농산물 가공 시 항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 농지에 건축물 규제는 건설교통부 소관, 농산물 가공은 식약청 소관으로 관할 부처도 각각이라 감독 자체만도 쉽지 않음.<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공시지가 기준 재설정 요구

- 4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다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농사를 줄여나가고자 농지매도를 하려고 하니 ‘양도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제 20여년이 넘어가는 땅인데, 그 당시 공시지와와 현 시세 차익의 몇 십프로를 양도세로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임. 공시지가 기준을 현 시세에 맞게 재설정해주길 바랍.<경기 안성, 이길숙>

○ 친환경농산물인증 부실 우려, 인증심사기준 강화해야

-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을 통한 보조금 지원으로 부실인증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위원의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전남 순천, 김종근>

○ 농약잔류검사 확대 실시해 무농약농산물 출하 장려금 올바르게 지원해야

- 무농약 재배농가의 선별지원이 요구됨. 무농약으로 농사 경작신고만 해도 지원되는 현 제도는 무농약 농사를 충실하게 실천하는 생산농가에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음. 농산물 농약잔류검사를 확대 실시해 무농약 농산품 출하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기를 바랍.<강원 영월, 유영조>

○ 발직불금제도 재배품목 규정안 수정 요구

- 현재 발직불금제도는 재배품목이 한정되어 있음. 재배품목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지목이 밟이면, 발직불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생각함.<전남 화순, 나중주>

○ 축사건축 허가 남발로 환경오염 우려, 일정거리 규제 필요

- 진흥지역 내 축사 건축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허가 되며, 500미터 간격으로 얼마 멀지않은 거리에 온통 축사로 가득할 지경임. 어쩌다 농기계창고를 신축할 경우 허가가 매우 까다로운 반면, 축사 허가는 남발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됨. 축산도 농업분야에 속하지만,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측면에서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할 것임.<강원 평택, 연규석>

□ 기존 규제개선 제안 내용

○ 소규모 농산물가공업 폐수 배출 시설기준 완화 요망

- 농가에서 자가생산한 원부재료를 이용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 시 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환경법상 무조건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소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출수를 폐수로 분류해 고가의 폐수처리시설 설치·관리해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봄. 가공품목과 제조량, 유해여부에 따라 설치하게끔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 농가보조금 지원사업 부가세 면제 또는 환급 가능하게 해야

- 새로운 시설 도입, 보강에 적잖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사업자는 사업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업인은 부가세 환급이 금지되어 있음. 보조금지원사업 시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농가도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가능하게 해야 함.<경기 용인, 김정태>

○ 외국인근로자 패널티 제도로 고용주 피해 최소화해야

-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나, 농업여건에 맞지 않는 짧은 근로시간, 근로자의 무단 근무이탈, 사업장 변경, 근무소홀, 사고 피해 보상 등 오히려 고용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일반 산업과 달리 적용해야 하며, 근로계약 불이행 시 경고 조치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경기 남양주, 김용덕>

○ 외국인근로자고용 관련 산재보험 개선 절실

- 농가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경영하고 있으며, 과도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가입이 취약한 실정임. 근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치료비, 임금, 중간 브로커 수수료 등 비용발생이 큼.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농업의 특성에 맞게 농업인전용 산재보험제도 도입이 시급함.<경기 광주, 임광혁>

○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면적 확대 요구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음. 그러나 주거시설 외 축사, 창고 등 기타 시설은 철거대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든 시설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임.<전남 순천, 김종근>

○ 농지에 시설물 설치 및 건축에 규제 필요

- 농사짓던 땅에 관광시설과 펜션이 줄지어 들어서고 광활한 농지 한가운데 시설물이 미관적으로 혹은 농지관리 측면에서 악효과가 발생하기도 함. 시설물 설치 및 건축 등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함.<경남 거제, 옥을석>

○ 산림개발허가 엄격화해 산의 공익적 가치 보존해야

- 물류창고나 공장,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산림개발을 허가받아 공사를 짓고 있는 곳이 많음. 개인 소유의 산이라도 지나친 개발로 인해 경관의 조화를 깨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심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함.<경기 이천, 김민호>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지역축제 과열 심각, 특색 있는 축제로 통합 운영해야

- 홍성군의 경우 광천 새우젓축제, 국화축제, 조양문화제, 남당리 대하축제, 천북 굴축제, 군민체육대회 등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음. 몇 개의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게 되면 재정부담도 줄이고 주민참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됨.<충남 홍성, 김건태>

- 각 사군에는 비슷한 종류의 축제가 너무 많음. 자기 지역 특유의 축제를 발굴하고, 이러한 특유의 축제는 지역의 개성을 인정하도록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막아야 할 것임.<경남 의령, 전연수>

○ 농협 농자재 구입 시 조합원 상환 혜택 늘려줘야

- 농협 조합원들에게는 농자재 구입 시 농자재 값의 20%정도를 상환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할인해주는 것처럼 포장되어 비싼 농자재 값을 상환해주는 것은 딱히 혜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농협의 농자재 가격을 시중가격과 동일하게 산정하거나 상환 혜택을 늘려주길 바람.<경기 남양주, 김용덕>

○ 농촌 고령화 가속, 노후복지제도 개선 시급

- 농촌의 고령농민들은 도시 고령자와 달리 육체적인 노동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비율이 더욱 높는데, 농촌의 노후복지제도라고 해봐야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것이 전부인 실정임.<전남 순천, 김종근>

○ 동결된 쌀값, 현실화 촉구

- 쌀값을 올해 결정하면 4년간 동결이라 함. 비료, 라면, 설탕, 기름, 술 등 일반 식품가격은 수시로 오르는데, 왜 쌀값만 4년이란 기한이 정해지는 것인지, 쌀값도 수시 조절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함.<전남 화순, 나중주>

○ 농업·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시급

- 농촌소식이라고는 풍수해나 농산물 값이 오를 때, 뉴스를 통해 보는 것 외에 접할 기회가 없어 여전히 대다수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이 그저 나이든 농민들이 힘겹게 농사짓는 곳, 멀게만 느끼고 있는 것 같음. 도시민의 귀농책으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긍정적 이미지, 현장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 좋겠음.<전남 순천, 김종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1월 4일~8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밤·고구마 풍년...가격 폭락

○ 겨울 대표 간식거리인 **밤·고구마 가격 큰 폭 하락**. 지난해 가뭄으로 흉년 이었던 반면 올해는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이 좋아 **출하량 및 생산량 증가**로 풍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1.2일, **고구마** 상품 10kg 도매가격 1만1,250원, **전년 동기대비**(2만554원) **45.3%↓**, **밤** 상품 10kg도매가격 3만6,250원, **전년 동기대비**(4만7,500원) **23.7%↓**. 감자 대표 품종인 수미 감자(20kg 기준 상등급) 1만8,869원, 전년 동기대비(2만777원) 10% 가량↓. 고구마는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 늘고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 밤 생산량도 약 20% 증가. 감자도 지난해보다 10% 정도 생산량이 많아진 데다 봄에 저장된 물량까지 겹쳐 전체 시장 물량이 15% 가까이 확대. 여기에다 **늘어난 공급에 비해 수요는 오히려 줄어 가격 급락** 더욱 부채질

자료 : 연합뉴스·한국경제·MBC·YTN(2013.11.3.) / 매일경제(2013.11.4.)

□ 일본 정부, TPP 대비 쌀 생산조정 50년 만에 폐지

○ 일본, 11.6일,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지난 **1970년 도입한 ‘생산조정’** *을 5년 후인 **2018년 폐지**, 집권 자민당도 이런 방침 수용. 쌀값 유지 위해 정부가 쌀 경작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년 생산량을 조절해온 ‘생산 조정’이 **반세기만에 폐지**.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앞두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 공세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치. 생산조정이 폐지되면 (현행) 정부가 매년 주식용 쌀의 생산목표를 정해 생산을 강제 억제하는 방식 → (변경) **농가 스스로 시장 동향과 수요를 예측**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 또한 **생산 조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해온 **보조금도 5년간의 ‘감액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폐지**

※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을 정하고 그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이들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 현재 이 정책에 따라 쌀이 아닌 다른 농작물로 전작을 할 경우 10아르(100㎡)당 1만5,000엔 정도 보조금 수령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가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 내에서 체결한 다국적 무역 협정으로 관세 철폐가 목표. 2008년 미국 가입한 후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주목.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은 세계 GDP의 40%, 무역량 1/3 차지

자료 : 서울경제·한겨레·SBS(2013.11.7.) / 아주경제(2013.11.8.)

□ 정부, 쌀 고품질화 정책 손나

○ 정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시행하던 **쌀 고품질화 정책 후퇴** 우려. **▲유통활성화 사업비 급감**...(2009년) 330억 원 → (2010년) 309억 원 → (2011~2013년) 연간 140억~160억 원 → (2014년 예산안) 120억 원 → 2017년까지 90억 원 이하. **▲쌀 수급상황 변화의 영향**...쌀 생산량 (2008~2009년) 연간 490만t 안팎 → (2010년) 429만t으로 감소, 2012년까지 3년 연속 흉작으로 **쌀 수급이 크게 불안**해지자 **수급안정 정책**에 **집중**한 결과 쌀 고품질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들녘별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미미**...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50ha 이상 규모화된 들녘 2832곳 가운데 500곳을 들녘별경영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년 50곳을 들녘별경영체로 선정, 예산이 연간 10억~20억 원**에 불과해 **교육·컨설팅 위주로 사업비 지원**. 반면 경영체 조직화에 필수적인 공동방제기 같은 시설·장비는 연간 5~15곳에만 지원해 **호응 낮아**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1995년부터 고품질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10년부터 사업규모가 대폭 줄어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보에 차질

자료 : 농민신문(2013.11.6.)

□ 식품 유통기한 표시, 전면에 크게 해야

○ 안전행정부, 10.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병무청 등과 함께 **올해 말부터 식품제조업체는** 컵라면이나 우유 등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식품 전면에 크게 표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75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 발표. **(현재)**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위치는 식품제조업체마다 **제품의**

측면·아래 등 제각각 → (개선) 글자 크기 기존 10포인트 → 12로 확대.

정부는 이 같은 권고 기준을 마련해 각 식품제조업체에 보급할 계획

자료 : 농민신문(2013.11.4.) / 한국농어민신문(2013.11.7.)

□ GAP 인증비를 3%불과...대책 시급

- 농식품부, **전체 농산물 대비 GAP 인증 비율을 2015년 10%(면적 대비), 2017년 30%까지 높인다는 목표**. 하지만 **GAP 인증 비율**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2012년 **3.2%(5만5,000ha · 4만200농가)**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태. ▲농산물우수관리제(GAP) 확대를 위해서는 **진입 장벽** 낮추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성 집중 홍보** 등 실질적 대책 필요... 불필요한 인증 절차 간소화, GAP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홍보·관리 예산 확보, GAP 농산물을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 등에서 우선 구매 방안 모색 등 판로 확대,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성 집중 홍보. 인증은 보다 쉽게 받고 위해요소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GAP 종합 개선방안’ 이달 안에 마련할 계획

자료 : 농민신문(2013.11.4.)

□ 농촌지역 평균 진료비, 도시보다 최고 2.5배

- 국민건강보험공단, 11.5일,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발표. 2012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 진료비 53조4,458억 원, **1인당 평균 진료비 104만 원. 부안군(186만7,644원)**이 전국에서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고흥군(186만2,903원), 경남 의령군(183만2,847원), 전북 순창군(181만6,795원), 전북 임실군(181만1,303원) 등 순. 경기 수원시 영통구(73만2,662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81만9,214원), 경기 화성시(82만7,589원) 등 **도시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적으며, 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가 도시지역에 비해 최고 2.5배나** 높게 나타나 노인층이 많이 사는 농어촌 지역의 평균 진료비가 많은 반면, 젊은 층이 많은 수도권 신도시나 공업도시의 진료비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자료 : 농민신문(2013.11.8.)

□ 경영이양직불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노후생활 안정 기여

- 농식품부, 9.10~10.2일간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한 **고령 은퇴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은퇴 후 연간소득 1,000만 원 미만 비율** 2012년 76% → **2013년 66%(10%p↓)**.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응답비율 2012년 72% → **2013년 77%(5p↑)**로 높아지는 등 응답자 대부분 **제도 지속화**와 **응답자의 76%가 보조금 단가 인상, 사업대상 규모 및 연력 확대 희망**. 진흥지역 밖 농지도 대상지 포함 지적. 현재 ▲지원단가...ha당 300만 원, 월 25만원씩 분할 지급, ▲지원한도...매도임대 각각 2ha, 개인당 최대 4ha까지 지원

※ 65~70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로 이양하면 정부가 1ha당 300만 원(월 25만 원씩 분할 지급) 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6~10년 간 지원, 1997년 처음 시행돼 2012년까지 고령농업인의 농지 7만 1,000ha가 6만 8,000여 전농업 등에 이양

※※ 2012년도에 경영이양에 참여하고 2013년 약정이 유효한 2,907명 중 1,019명 고령 은퇴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11.4.)

□ 국민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농업 6차 산업화 적극 지원

- 농식품부, 11.1일, 제2차 국민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개최, 농정의 핵심 과제인 **6차 산업화** **점진** 및 **현장 의견 청취**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6차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기술마케팅·판매 등 현장지원 방안**과 **지역의 6차산업화 주체 간 연대협력 강화** 방안 토론,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될 계획인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해 지자체·전문가·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청취, 새롭게 관심이 늘고 있는 **산림치유 활성화 방안** 논의, ▲만성적인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협에서 운영 중인 **인력중개센터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 박근혜 정부 농정의 핵심 과제인 ‘**6차산업화**’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성과 제고**, 다른 농정과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업**하고 **수시로 소통**할 계획

자료 : 아주경제(2013.11.4.) / 한국농어민신문(2013.11.7.)

참조 : 농식품부 보도자료_「6차산업화로 농식품·농촌 일자리 확대」(2013.11.2.)

□ 국외 농예수위, 2012 외계연도 농식품부 결산심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4일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2012회계연도 결산’ 진행

- 농식품부 중점적 질의, 농식품부 예산의 효율성을 비롯 FTA 대책사업 등에 대해 지적

[FTA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관련성 낮은 사업들 다수 포함]

○ 정부,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2008~2017년 23조1000억 원 84개사업, 한·EU FTA 보완대책으로 2011~2020년 10조8000억 원 32개 사업에 각각 지원

- 중복사업 17개를 제외한 총 99개 사업을 살펴보면 FTA 피해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 포함

※ 한·EU FTA 대책인 살처분보상금(2012년 예산 400억 원) 1982년부터, 시·도 가축방역(751억 원) 1945년부터, 한·미 FTA 대책의 수리시설개보수(300억 원) 1968년부터, 다목적농촌용수개발(300억 원) 199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

[변동직불금 과다하게 계상하면서 농업예산규모 부풀리기]

○ 농식품부 예산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낮은 변동직불금 예산 많이 편성해 예산 규모만 키워놓고 정작 중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부족

- 변동직불금 예산 2012년 620억 원, 2013년 252억 원 전액 불용, 2012년·2013년 각각 정부가 제출한 4,620억 원·3,252억 원에서 4,000억 원·3,000억 원 감액했음에도 변동직불금 발동되지 못하면서 예산 불용 처리

[전용·불용액 2조 원 달해 농식품부의 예산 효율성 저조]

○ 15개 행정부처에서 농식품부 예산의 불용·전용액 비중 최고

○ 농식품부 예산 불용액 9,489억 원, 15개 부처 중 두 번째 많고, 전용액 1조109억 원으로 가장 많은 상황

※ 2012년 불용예산 많은 주요 부처를 살펴보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1조764억 원 > 농식품부 9,489 > 국방부 6,987 > 국토해양부 6,863 순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1.7.)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11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조사대상] 전국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의 외국인 1만 명 대상*으로 2013. 5. 12 ~ 5. 18 1주간 경제활동 상태 조사

○ [조사기간] 2013. 5. 27 ~ 6. 7

□ 주요내용

○ 외국인 112만 6천 명, 취업자 76만 명, 실업자 3만 3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 33만 3천 명

- 경제활동참가율 70.4%, 고용률 67.5%, 실업률 4.2%

- (외국인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수(2013.5월, 2,539만 8천 명)의 3.0% 수준

※ 전년대비 0.2%p↓

○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 37만 7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3만 8천 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3만 7천 명), 건설업 6만 4천 명) 순

- 2012.6월 대비, 광업·제조업(9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천 명) 증가 / 건설업(-2만1천 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만 2천 명), 농림어업(-8천 명) 감소

○ [직업별 취업자]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8만 4천 명), 단순노무 종사자(25만 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9만 3천 명), 서비스·판매 종사자(8만 7천 명) 순

- 2012.6월 대비, 단순노무종사자(1만 1천 명), 사무종사자(4천 명),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천 명) 증가 /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만 6천 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천 명) 감소

-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전문취업(22만 6천 명), 방문취업(18만 6천 명), 재외동포(12만 4천 명), 영주와 결혼이민(각각 5만 8천 명) 순
 - 2012년 6월 대비, 재외동포(2만 5천 명), 영주자(1만 1천 명) 증가 / 방문취업(-5만 5천 명), 비전문취업(-1만 2천 명) 감소
- **[국적별 취업자]** 한국계 중국인(33만 1천 명), 베트남(7만 6천 명), 중국 [한국계 제외](5만 5천 명), 북미[미국·캐나다](4만 7천 명), 인도네시아(2만 9천 명) 등 순
 - 2012년 6월 대비, 유럽(2천 명), 북미[미국·캐나다](1천 명) 증가 / 한국계 중국인(-2만 6천 명), 베트남(-6천 명), 몽골(-3천 명) 감소
-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47만 2천 명), 임시·일용근로자(26만 3천 명), 비임금근로자(2만 5천 명) 순
-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20~29세(22만 2천 명), 30~39세(21만 8천 명), 40~49세(16만 8천 명), 50~59세(11만 6천 명) 등의 순
- **[주당 평균 취업시간별]** 40~50시간 미만(34.9%), 60시간 이상(30.7%), 50~60시간 미만(21.4%) 순
-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 10~29인(25.6%), 1~4인(20.6%), 5~9인(19.5%) 순
-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수준별]** 100~200만 원 미만(65.7%), 200~300만 원 미만(21.7%), 300만 원 이상(6.9%) 순
- **[비경제활동인구]** 33만 3천 명, 2012.6월(29만 명) 대비 4만 3천 명(14.8%) 증가
 - (활동상태) 육아 및 가사(13만 3천 명, 39.9%), 쉬었음(8만 8천 명, 26.3%), 정규교육기관 통학(7만 7천 명, 23.3%) 등
- **[국내 총 체류기간]** 1~3년 미만(35.1%), 3~5년 미만(21.3%), 5~10년(20.3%), 10년 이상(11.0%) 순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